

# 사업당사자가 보는 BK21 사업의 장단점

## 1. BK 21 사업의 비전과 목표

두뇌한국21사업 길라잡이(2001. 2. 교육인적 자원부 발간)를 보면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 집중육성”과 “지역대학특성화”를 통하여 고등인력양성체제구축과 대학교육개혁을 연계하여 BK21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비전을 가지고 분야별 공모, 경쟁방식에 의한 지원을 함에 있어서(과학기술분야)는 “선택과 집중” 지원 원칙을 유지한다고 하였으며, 사업추진방법은 종래의 관리위주에서 벗어나 “자율적(Management By Objective)”으로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유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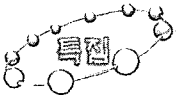
본 사업은 14개 분야 26개 사업단의 과학기술 분야, 5개 분야 18개 교육단의 인문사회분야, 9개 지역 13개 사업단의 지역대학육성분야, 8개 분야 12개 사업단의 특화분야(5년)로 이루어져 있으나 본고에서는 과학기술분야 특히 공과대학의 정보기술·기계·재료·화공·건설기술의 5개의 인력양성사업단에 대하여 사업 당사자로서 느끼는 BK21사업의 장단점을 논하고자 한다.

BK21사업의 주목표가 「대학원 집중 육성」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고등인력양성체제 구축에 있는 만큼 5개 계열 공과대학의 사업단 이름도



윤종규

서울대학교 재료연구인력양성사업단장



“...인력양성사업단”으로 되어있다.

이 사업은 세계적 수준의 대학연구와 창의적인 인력양성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는 일차적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추진 방법도 “선택과 집중지원”인 만큼 교육부의 균등배분 원칙에서 탈피하여 경쟁 후 선택적이면서 집중적 지원이 지금까지의 지원정책과 크게 다른 것으로 과거의 평균주의의 방법에서 탈피한 과감한 정책이라고 생각되며, 이점 교육부의(현재의 교육인적자원부) 본 사업 입안자에게 큰 점수를 주고 싶다. 일부대학에 집중지원은 현재 대한민국 대학교육의 실정으로 볼 때 불가피한 사정으로, 지원에서 제외된 대학들의 불평은 이사업의 목표를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고 볼 수 있다.

## 2. 두뇌한국21사업과 대학원 중심 대학육성의 연계성과 문제점

사업단 선정은 “경쟁을 통한 선택”을 하여 “집중”적으로 지원 하겠다는 것이며, 규제를 가능한 한 줄여서 사업 목표를 달성하는 어떠한 방법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BK21사업이 우수하고 전례를 찾아 볼 수 없는 파격적인 Program임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1) 사업준비 기간이 부족하여 교육부에서도 담당 부서가 바뀌어 입안자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있으며, 소수의 대학에 특정 분야에만 “선택과 집중”으로 지원하려던 원칙이 무너지고, 과학기술분야 및 협력사업단도 무려 43개 사업단이 되어 본래의 목적이 많이 희석된 느낌이다.

2)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이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KAIST는 지난 30여년 간 BK21 사업이 추진하고자 하는 제도개혁, 대학원생 인건비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대학평가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서 출발하고 있는 실정으로 타대학과 제도개혁, 연구비 중앙관리 제도 등을 경쟁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볼 수 있다.

3) 서울대학에 연구 인프라를 지원하는 점 이외에 부족한 연구장비와 연구시설 개선은 고려하지 않고 대학원 학생들의 처우 개선만으로 연구력 및 인력양성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과학기술부의 우수연구센터 및 국방부의 병역특례 등 관계부처와의 연계 부족으로 연구중심대학을 지향하면서도 교육과 연구를 분리하여 생각하였다.

4) 제도 개혁에 큰 비중을 두고 있어 실질적인 연구중심대학 육성과 상치하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다. 학부의 규모를 줄이고 대학원 중심의 교육을 하는 것은 좋으나 제도개혁의 일환으로 학부의 신입생 모집을 광역단위로 하는 것은 학문간 불균형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5) 획일적인 예산 편성 때문에 필요 없는 부분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신진인력양성 등의 기획은 좋으나, 분야나 대학의 위치에 따라 박사후 과정이 많이 필요한 분야도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분야도 있어 자율적 예산편성이 요구되고 있다. 무리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가 있어 불필요한 경우에도 후진국의 post-doc을 채용하여 신진인력양

성이 마치 후진국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자교 졸업생비율을 30% 이내로 제한한 것도 학교에 따라서는 도저히 맞출 수 없는 부분으로 집행에 큰 무리가 되고 있다.

### 3. 사업추진의 개선방안

본 사업이 종래 없었던 평균주의를 지양하고 집단의 우월성을 기초로 한 “집중과 선택”에 있는 만큼 교육부와 사업참여 교수들은 외풍에 굳건히 맞서서 본 사업의 장점을 홍보하여야 하며,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인력양성을 위하여서는 각 사업단에게 사업의 목표와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을 자율적(Management By Objective)으로 하여, 최대한의 성과를 도출하는데 주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앞에 지적한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함은 물론이며 다음과 같은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1) 제도개혁 부분은 연구인력양성과 무관할 수 있는 문제로 일차적인 개혁이 이루어진 시점에서는 본래의 경쟁력 있는 연구인력양성에 주안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율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예산을 사업단에 맞게 편성하여 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병역특례 보충역에 대한 유연한 관리, 사업단장의 타 부처 주관사업 참여에 대한 제약 철회 등 부처 간 정책 연대를 공고히 하여, 사업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잦은 실사·평가 등으로 인하여 대학원생 및 참여 교수로부터 원성을 많이 사고 있어 가능하다면 실사 평가를 줄였으면 좋겠다.

5) 참여대학의 경우 참여학부 교수의 1/3 정도가 참여하고 있으나, 경쟁을 촉진하고 교육적인 면을 고려 할 때 참여하지 않는 2/3 교수 중 업적이 우수한 교수는 사업에 참여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4. 실무적 운영에 고려 할 문제점

1) 예산집행 후 미집행 액의 이월 범위를 항목별로 정하고 있어 항목별 예산집행의 압박 때문에 불요불급한 집행 사례가 있어, 이월액을 전체 예산의 일정율로 정하면 사업 회계년도 말에 가서 집중적으로 예산 집행을 하는 사례를 줄일 수가 있다.

2) 인력양성 프로그램이긴 하나 1차~2차년도에 사업비 지급 지연과 홍보부족으로 집행하지 못한 신진인력양성 항목의 예산을 연구여건개선에 필요한 기기·재료구입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다.

3) 사업단장에게 많은 책임을 지우고 있으나 인센티브가 없어 사업단장이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

4) 산업체 대응자금 확보율을 현실에 맞지 않게 과다 책정하여 목표량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확보율을 현실화하였으면 좋겠다.